



07-15 (통권 246호)

2007.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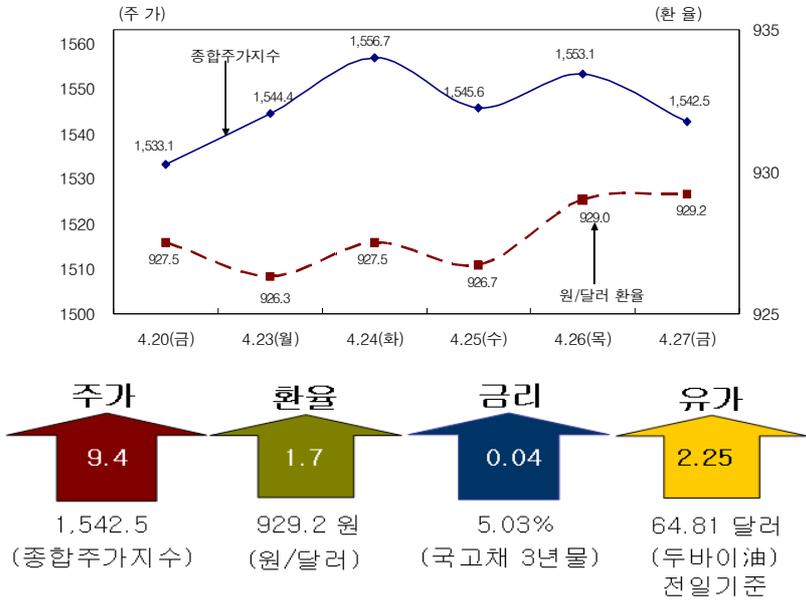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私教育,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  
-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4.20~4.2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私教育,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	
-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1
주간 경제 동향	17
□ 실물 부문 : 1/4분기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 증대	17
□ 금융 부문 : 단기 외화차입 자제 요청에 따른 금리의 강세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미래기업연구실 : 이 철 선 연구위원 (3669-4128, cslee@hri.co.kr)  
                           이 주 량 연구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

# Executive Summary

## □ 私教育,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

-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 1. 문제의 제기

소득배분 의사결정이론으로는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안도-모딜리아니의 평생소득가설(Lifetime Income Hypothesis)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하면 가계는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현재 삶의 질)와 저축(미래 삶의 질)간의 균형을 맞추는 의사결정을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가계는 부모와 자녀간 삶의 질의 균형도 추구한다. 부모-자녀간 소득배분 문제는 정태적 분석에서는 설명이 어려웠으나,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과 같은 동태적 분석방법이 등장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미래간, 부모-자녀간 소득 배분의 균형점은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은 유독 자녀가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그 이유를 역사문화적 요소나 사회적 가치기준의 측면에서 찾아본다면, 우선 핵가족화가 급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노후를 결정한다는 대가족제도의 정신적 틀이 여전히 유효한 과도기적 상황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인의 성취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평범한 것은 도태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의 자녀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 기준이 되어 부모들로 하여금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가계의 교육 투자, 특히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공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지출액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사교육비 부담이 가세하여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줄이고 있다. 한국의 사교육 산업이 '00년 6.1조원에서 '06년 11.7조원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 급증은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경제적으로는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나 저축을 위축시키고 있다.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교육 실태, 사교육시장 및 지하경제 규모, 사교육의 폐해를 확인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은 크게 2개 파트로 실시하였다. 우선 유치원 취학적령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 2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일 현재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012개 가구(자녀수 1,704명)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이하 설문조사 결과)

### 2. 우리 국민의 사교육 실태

(사교육 참여 현황 및 이유) 우리 학생들은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유치원(92.5%)에서 고등학교(54.7%)로 올라갈수록 참여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향상과 입시(44%), 능력 및 적성 개발(17.3%), 공교육 부실(13.7%) 등의 순으로 **기본적으로는 공교육의 보완적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해서(11.0%), 친구 교체(3.0%)와 같이 사교육 불참에 따른 내신 성적의 피해, 친구 사귀기 어려움 등 **사교육 참여를 강요하는 사회적 여건**도 한 몫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 유형과 과목**)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은 학원(유아는 유치원)이 61.1%로 가장 높았고, 학습지 29.9%, 개인과의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과목은 상위학교로 진학할수록 예체능의 비중은 떨어지는 반면, 입시과목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은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아 최근의 영어교육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 효과와 공교육 만족도**) 사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는 3.7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5점 척도) **전체 응답자 중 65.6%가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5%로 매우 미미하였다. 유형별로는 학원, 과외 등 대부분 유형에서 실력 향상 응답이 70% 내외를 차지하는 가운데, **해외연수는 예상과는 달리 긍정적 응답이 33.3%에 머물러 효과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공교육 만족도 평가는 3.11점에 머물러 사교육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공교육에 조금이라도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8%에 불과**했다. 공교육의 불만족 사유로는 교양인성 교육 부족 36.7%, 선생님의 성의부족 34.5%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교육비 지출 현황 및 규모 추정

(**월평균 금액 및 지불 방법**)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1,700원**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중학교까지는 매월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20~40만원 사이에, 고등학생은 40~60만원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예상대로 고등학교가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6.7%, 초등학교 2.7%, 유치원 2.1% 등 저학년에서부터 고액 사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지불 방법을 보면, **전체 응답가구의 70.0%가 현금지불이었고, 현금지불 가구 중 62.9%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약 44% 정도의 사교육비가 지하경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시장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국내 사교육시장 총 규모는 **최대 명목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2006년 명목GDP, 2006년말 학생수, 2007년 4월 설문조사 결과 적용) 동 금액은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 31조 원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중 **지하경제화 가능성이 있는 사교육비의 최대 금액은 명목GDP의 1.74%인 약 14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 4. 사교육의 폐해

① 사교육비 부담은 월평균 소득액의 19.2%에 달하고,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부업을 하는 가구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6만 원으로,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의 25.6%, 월 평균 수입액의 19.2%에 달하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 가구의 76.8%가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또한, 사교육비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조사 대상 가구의 26%, 즉 4가구당 1가구 꼴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사교육비가 노후 대비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삶의 질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사교육비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 지출 항목은 노후대비가 가장 크고,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노후대비,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교육의 폐해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사교육의 폐해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34.0%)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은 당장의 삶의 질 문제, 중산층은 노후 보장의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고소득층은 계층간 위화감을 가장 중요시하여, 우리의 여건상 사교육에 대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교육의 사회적 파장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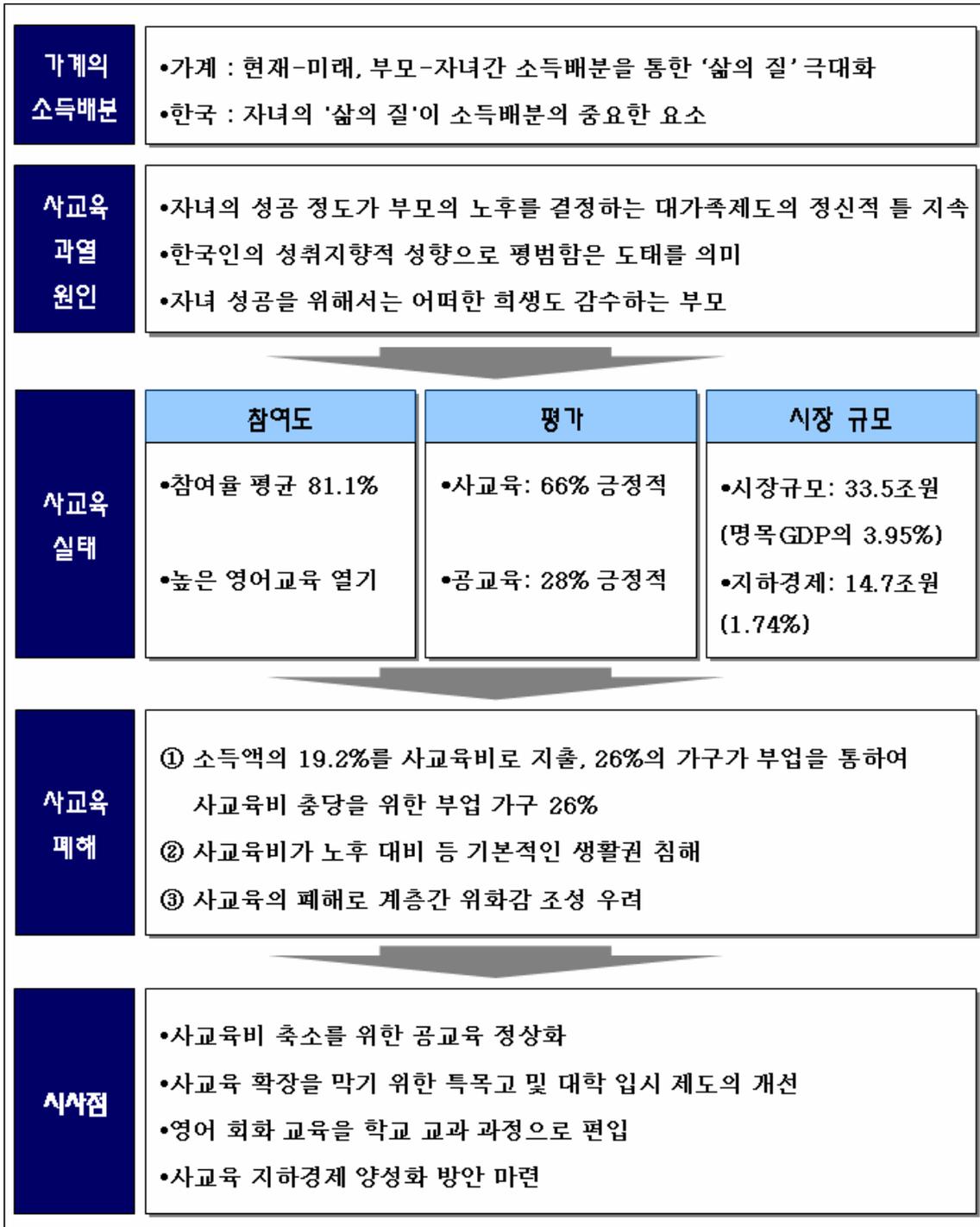
첫째, 사교육비 축소를 위해 조속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 사교육비의 급증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므로 교원 평가제도 등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 차원의 사교육 대체 대책은 사교육 경감효과도 없을뿐더러, 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하므로 사교육비 축소의 대안이 아니다.

둘째, 사교육 확장을 조장하는 특목고와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관행을 개선하고 진정한 의미의 수학능력, 인성 등 다양한 기준의 선발 방식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특목고는 선발 방식 개선, 당초 도입취지에 맞는 운영 등을 통하여 사교육 급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어 회화 교육을 초, 중등 교과과정내로 편입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영어 회화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영어 회화 교육 정상화시까지의 공공 부문에서 어학연수나 영어 사교육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교육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도록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여, 반면에 세원의 철저한 발굴 등을 통하여 지하경제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私教育,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 >



## 1. 문제의 제기

### ○ 가계 소득과 삶의 질

- 가계는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와 저축간의 균형을 맞춘다
  - 소비 관련 의사결정이론은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안도-모딜리아니의 평생소득가설(Lifetime Income Hypothesis)이 대표적이다
  - 이와 같은 이론들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와 저축 간의 배분을 통하여 평생 동안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계 부문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소비는 ‘현재 삶의 질’을, 저축은 ‘미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소비와 저축간의 배분은 평생 동안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 가계는 부모와 자녀간의 삶의 질의 균형도 추구한다
  - 기존의 정태적 분석 방법들은 부모-자녀간 소득배분 의사결정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했으나,
  - 1980년대 들어 동태적 분석 방법론이 발달하면서 세대간 소득배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음
  - 특히,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이 보다 정교하게 발전되면서, 부모-자녀간 소득배분 의사결정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 한국 가계의 소득 배분

- 가계의 소득 배분 의사결정에 있어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독 자녀 부분이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 부모-자녀간, 현재-미래간의 소득 배분 정도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역사-문화적 요소나 사회적 가치기준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 한국은 핵가족화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 정도가 부모의 노후를 결정하는 대가족제도의 정신적 틀이 아직도 유효한 과도기적 상황이며

- 한국인의 성취지향적 성향으로 인하여 평범한 것은 곧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으로, 또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 이에 따라, 자녀의 성공이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

**-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음**

- 한국은 공교육에 대한 민간부담 지출액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90년대 중반 7~8% 수준에서 2005년 12%까지 급증한 것으로 조사<sup>1)</sup>
- 이와 같은 사교육비 부담은 사교육이 기존의 대학 입시 차원을 넘어서 특목고, 논술, 해외 조기 유학까지 확대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공교육에 대한 부담액 >**

분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평균
민간부담액	2.3%	1.3%	1.4%	1.2%	2.9%	1.3%
정부부담액	5.1%	4.9%	4.5%	3.5%	4.6%	4.6%
합계	7.4%	6.2%	5.9%	4.7%	7.5%	5.9%

자료: 매일경제, 2006.12.12.

**○ 사교육 산업의 성장**

- 한국의 교육산업 규모는 2000년, 6조 1,000억 원에서 2006년에는 11조 7,151억 원으로 규모가 약 2배로 성장함
- 이와 같은 수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집계된 것이며, 지하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sup>2)</sup>
- 사교육 시장 성장은 사교육기업들의 매출액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대교 등 교육 관련 상장 10개사들의 매출 총액은 2002년 말 5,687억 원

1) 한국교육개발원, 대우증권 공동 조사. 2006.12.12. 매일경제신문에서 재인용  
 2) 기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교육시장은 2001년에는 약 14조원에서 2005년에는 약 21조 원까지(조기유학비 포함시 27조원) 증가, 매일경제신문 2006.12.12.

에서 2006년 1조 7,323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증권거래소 발표)  
 이외에 하나로텔레콤, KT,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기업들도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사교육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sup>3)</sup>

< 상장 사교육기업의 매출액 추이 >

기업	매출			'04~'06 증감률
	2004	2005	2006	
디지털대성	142억 원	187억 원	199억 원	40.1%
케이스	270억 원	258억 원	284억 원	5.2%
대교	8,393억 원	8,155억 원	8,350억 원	-0.5%
YBM시사닷컴	294억 원	356억 원	426억 원	44.9%
메가스터디	503억 원	710억 원	1,013억 원	101.4%
웅진씽크빅	4,823억 원	5,423억 원	5,919억 원	22.7%
능률교육	225억 원	234억 원	276억 원	22.7%
이루넷	292억 원	278억 원	247억 원	-15.4%
엘림에듀	53억 원	36억 원	201억 원	279.2%
에듀박스	365억 원	422억 원	408억 원	11.8%

자료: 금융감독원

○ 사교육비 급증의 폐해

- 사교육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비 위축과 저축률 감소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사교육비가 급증하여 여타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가계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저축률을 낮추어 노후준비 등 미래의 삶의 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전반의 안정적 투자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감소(가계 저축률은 2000년 이전 10% 수준에서 2006년 5.9%까지 급격히 감소)
-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 부족액 충당을 위한 부모의 부업 증가 등 폐해가 심화되고 있음
  - 사교육에 의한 부의 세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부족액 충당을 위한 부모의 부업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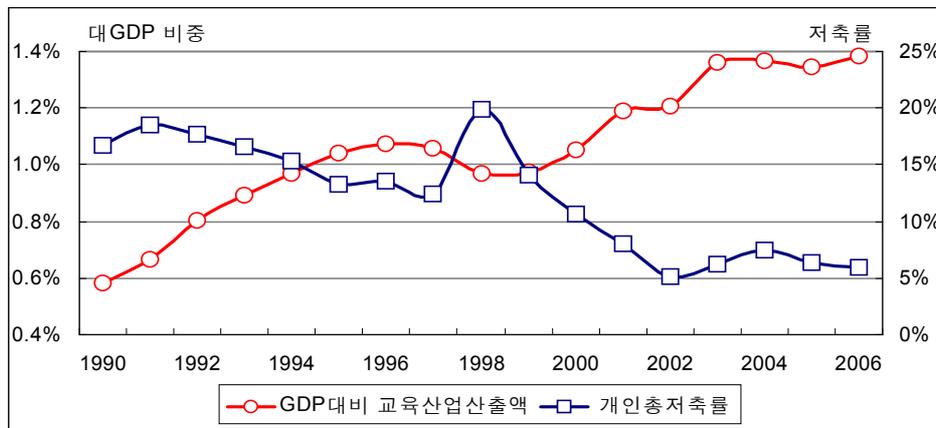
3) 세계일보, 2006.11.14.

< 한국의 항목별 가계지출 추이 >

지표	한국		OECD 평균
	2006년	2005년	
공교육 민간부담율	3.4% ( 1위)	2.9% ( 1위)	-
문화여가 지출	3.6% (24위)	2.7% (18위)	-
보건비 지출	778달러 (26위)	1,129달러 (26위)	2,560달러

자료: 『OECD Factbook 2007』

< 한국의 가계 저축률과 교육비의 대GDP 비중 >



자료: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GDP 및 GNI 및 국민계정, 2006.4.

○ 사교육 조사의 개요

- 본고에서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교육 실태를 점검함
  - 설문조사는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우선 사교육 참여여부는 유치원 취학 적령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자녀로 둔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 사교육 실태 조사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전국 1,012가구(학생 1,704명)를 대상으로 했으며, 방법은 전화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교육시장과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도록 함

## 2. 우리 국민의 사교육 실태

### ○ 사교육 참여 현황

- (사교육 참여율) 우리 학생들은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 참여율은 상위 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은 54.7%로 급격하게 떨어짐

#### < 사교육 참여율 >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339명	53명	143명	79명	64명
참여	81.1%	92.5%	89.5%	79.7%	54.7%
불참	18.1%	7.5%	10.5%	20.3%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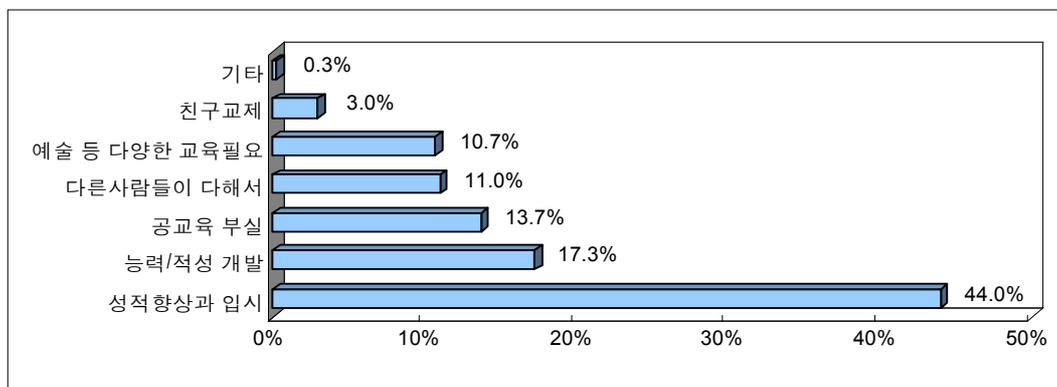
주 1: 전국의 학생자녀를 둔 200가구의 학생 339명 대상

주 2: 유치원생들의 참여율에는 유치원을 다니는 것도 포함

- (원인) 사교육 원인은 ‘성적향상과 입시’가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능력 및 적성 개발’ 17.3%, ‘공교육 부실’ 13.7% 등의 순이었음<sup>4)</sup>

·특히, ‘다른 사람이 다해서’(11.0%), 친구교제(3.0%) 등 사교육 불참시의 학교 성적에서의 상대적 피해나 자녀들의 친구 사귀기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사교육 참여 이유 >



4) 이하 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 1,012세대의 학생 1,704명 대상 조사 결과임

- (사교육 유형)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은 학원이 60%로 가장 많고, 학습지 29.9%, 개인과외 5.1%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는 학원 비중이 고르게 6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학습지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개인과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학생별 사교육 종류 >

구 분	재학 학교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응답자 수	280명	828명	372명	226명
학 원	61.1%	57.1%	61.6%	63.7%
학 습 지	29.9%	30.6%	18.2%	8.6%
개 인 과 외	5.1%	7.5%	13.1%	19.6%
그 룹 과 외	2.6%	2.8%	3.5%	3.6%
온라인 통신	0.3%	0.8%	3.4%	4.3%
기 타	0.6%	1.1%	0.1%	0.2%
해 외 연 수	0.4%	0.1%	0.1%	-

- (사교육 과목) 상위학교로 진학할수록 어학(영어), 수학 등 입시과목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예체능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어학이나 수학은 초등학교부터 급격히 증가함
- 어학은 초, 중학교에서도 높아서 최근의 영어교육 열기를 보여줌

< 학교별 사교육 과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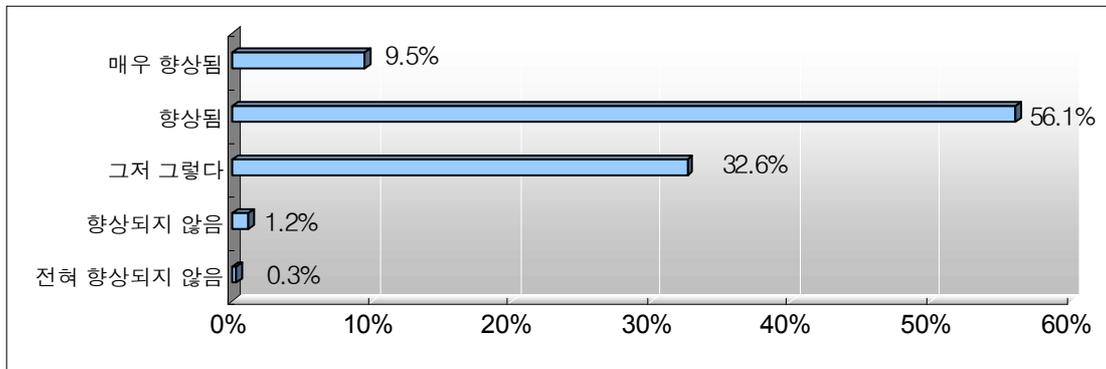
구 분	재학 학교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응답자 수	280명	828명	372명	226명
어 학	8.7%	28.2%	32.7%	31.8%
수 학	10.3%	22.0%	29.9%	34.8%
예 체 능	14.3%	26.6%	5.8%	3.8%
국 어·논 술	14.7%	15.2%	9.5%	12.6%
종합반·유치원	52.1%	8.0%	20.1%	14.5%
과 학		0.1%	2.0%	2.4%
사 회				0.2%

○ 사교육 효과와 공교육 만족도

- (사교육 효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는 3.74점(5점 만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65.6%가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응답
- 사교육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5%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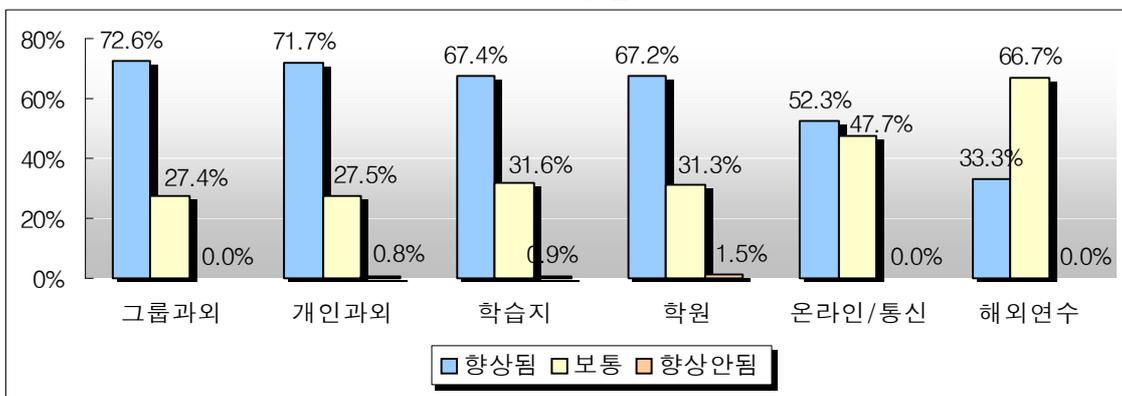
< 사교육 효과 >



- (유형별 효과) 유형별로는 해외연수가 예상과는 달리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불과 33%에 머물고 있음

- 전반적으로는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0% 내외였음
- 단, 온라인/통신 유형은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52.3% 정도로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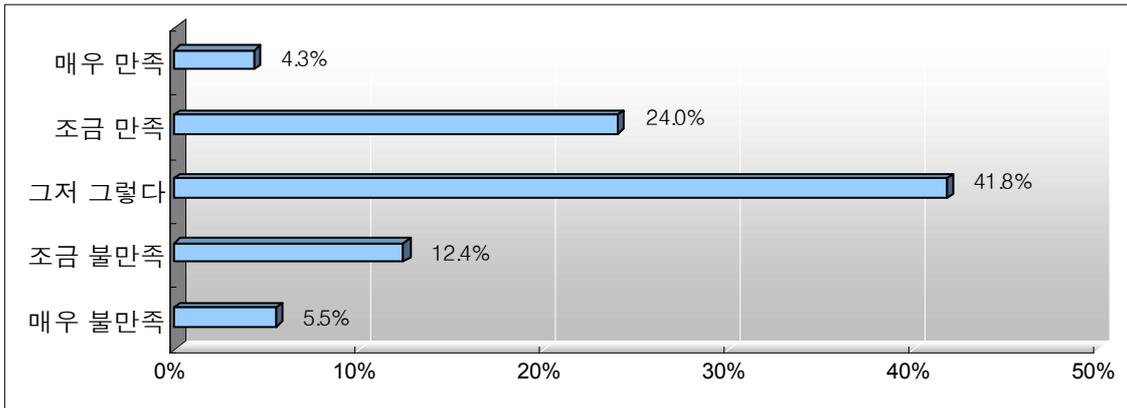
< 사교육 유형별 효과 >



- (공교육 만족도) 사교육의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공교육은 만족도가 3.11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조금이라도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8%에 불과 했음

< 공교육 만족도 >



- (공교육 불만족 사유) 교양인성 교육 부족(36.7%)과 선생님의 성의부족(34.5%)이 주요 불만족 사유로 나타남

·특히,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성의부족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녀 입시에 대한 선생님들의 불신으로 해석됨

< 공교육의 불만족 사유 >

구 분	전체	재학 학교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응답자 수	1,357명	212명	654명	304명	187명
교양, 인성교육 부족	36.7%	46.7%	38.1%	30.3%	31.0%
선생님의 성의부족	34.5%	29.2%	32.7%	37.2%	42.2%
공부량의 부족	13.6%	10.8%	13.5%	16.8%	12.3%
선생님의 지식부족	8.3%	6.6%	8.1%	9.5%	8.6%
학교교육의 부재	3.3%	2.8%	3.4%	3.6%	3.2%
과목부족	2.7%	3.3%	2.8%	2.6%	1.6%
과밀학급	0.8%	0.5%	1.5%		
의무적 야간학습	0.1%				

### 3. 사교육비 지출 현황 및 규모 추정

#### ○ 사교육비 금액 및 지불 방법

- (월평균 금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1,700원이었음
  - 유치원 ~ 중학교까지는 매월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20~40만원 사이에, 고등학생은 40~60만원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月 사교육비 현황 >

구 분	전체	재학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응답자 수	1,702명	280명	826명	372명	224명	
평균 지출액	381,700원	304,300원	323,600원	433,300원	606,500원	
月지출 금액별 분 포 (%)	~ 20만원	17.33%	20.36%	22.15%	9.95%	8.04%
	20 ~ 40만원	44.54%	56.07%	47.09%	41.94%	25.00%
	40 ~ 60만원	22.21%	15.71%	20.10%	28.23%	28.13%
	60 ~ 80만원	8.05%	5.00%	6.78%	9.68%	13.84%
	80 ~ 100만원	2.29%	0.71%	1.33%	3.49%	5.80%
	100 ~	5.58%	2.14%	2.54%	6.72%	19.20%

- (지불방법) 전체 1,011 응답가구의 70%가 사교육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 지불 가구 중 62.9%가 현금영수증을 받지않는 것으로 응답
  - 현금영수증 미수령분의 금액이 사교육 지하경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사교육비 지불 방법과 영수증 수령여부 >

구 분	전 체	지역			
		서울 신도시	6대 광역시	8개 시도	
지불 방법	응답자 수	1,011가구	239명	446명	327명
	현금	70.0%	68.9%	67.9%	73.7%
	지로(송금) 포함	15.7%	10.1%	17.5%	17.4%
	카드	14.2%	21.0%	14.6%	8.9%
현금납부 응답자 중 영수증 수령 여부	응답자 수	711명	162명	303명	246명
	미수령	62.9%	70.4%	59.7%	61.8%
	수령	37.1%	29.6%	40.3%	38.2%

○ 국내 사교육시장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 (국내 사교육시장 총 규모) 국내 사교육시장 총 규모는 3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명목GDP 대비 3.95%에 해당함
  - 유치원 학생 제외시 29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됨(명목GDP의 3.46%)
  - 동 금액은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 31조 원보다도 많은 금액을 국민들이 별도로 사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함

< 국내 사교육비 규모 >

구분	①월평균 사교육비	②전국 학생수	③사교육 참여율	④시장규모 (①×12월×②×③)
유치원생	304,300원	1,239,458명	92.5%	4조 1,866억 원
초등학생	323,600원	3,925,043명	89.5%	13조 6,413억 원
중학생	433,300원	2,075,042명	79.7%	8조 5,991억 원
고등학생	606,500원	1,775,857명	54.7%	7조 698억 원
시장 규모	전체			33조 4,968억 원
	유치원 제외			29조 3,102억 원
GDP 대비	전체			3.95%
	유치원 제외			3.46%

주 1: 초중고생 수는 2006년말 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7.4 발표), 유치원생은 2006년말 기준 전국 6,7세 아동 수 추계치(통계청, 2005 발표)  
 2: 명목GDP는 2006년 847조 9,000억 원 적용

- (지하경제 규모) 지하경제의 규모는 최대 1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명목GDP의 1.74%)
  - 유치원 학생 제외시, 최대 13조 2,000억 원으로 추정(명목GDP의 1.55%)

< 국내 사교육비 중 지하경제 규모 >

구분	④시장규모	⑤현금지불 비율	⑥현금영수증 미수령비율	지하경제 규모 (④×⑤×⑥)
유치원생	4조 1,866억 원	68.6%	53.6%	1조 5,394억 원
초등학생	13조 6,413억 원	74.6%	62.8%	6조 3,908억 원
중학생	8조 5,991억 원	66.7%	62.3%	3조 5,733억 원
고등학생	7조 698억 원	68.4%	66.4%	3조 2,109억 원
시장 규모	전체			14조 7,144억 원
	유치원 제외			13조 1,750억 원
GDP 대비	전체			1.74%
	유치원 제외			1.55%

#### 4. 사교육의 폐해

① 사교육비 부담은 월평균 소득액의 19.2%에 달하고,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부업을 하는 가구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가계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6만 원으로, 월 평균 지출액의 25.6%를 차지함  
·한편,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하고 있음

##### <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 >

구분	전체	연소득			
		~3천만원	3~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79	276	414	257	32
월평균 총 사교육비(만원)	64.6	38.1	58.3	90.4	166.4
월평균 전체 지출액(만원)	252.9	159.8	240.4	339.4	545.7
지출액 대비 사교육비(%)	25.6	23.8	24.3	26.6	30.5
소득 대비 사교육비(%)	19.2	20.5	19.2	18.5	14.3

- (사교육 부담 및 비용 마련) 조사대상 가구의 76.8%가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며, 26%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8.4%에 불과하였음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부업을 하는 가구의 비율도 4가구 중 1가구 꼴인 26%에 달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부업의 비율은 높았음

##### < 사교육비 부담 여부 >

	매우 부담	부담	그저 그렇다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비율	36.4%	40.4%	14.6%	5.8%	2.6%

##### < 사교육비 충당을 위한 부업 여부 >

구분	전체	연소득			
		~3천만원	3~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78명	276명	414명	256명	32명
부업 무	74.0%	65.9%	74.4%	80.9%	84.4%
부업 유	26.0%	34.1%	25.6%	19.1%	15.6%

② 사교육비가 노후 대비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음

- (희생 소비 항목) 사교육비 부담으로 기본적인 생활권이 크게 희생
  - 사교육비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 지출항목은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고소득 가구의 경우 가장 희생하는 것이 레저/문화생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 저소득일수록 노후대비,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마저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없을 경우 대체소비 항목 >

구분	전체	연 소득			
		~3천만원	3~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74명	275명	412명	255명	32명
노후대비(저축, 재테크 등)	57.2%	56.0%	60.9%	54.5%	40.6%
레저/문화생활	25.4%	18.6%	23.1%	33.7%	46.9%
건강관리	13.9%	18.9%	12.4%	11.0%	12.5%
주거비	2.6%	5.1%	2.7%		
식품비	0.7%	1.5%	0.5%	0.4%	
의료비	0.3%		0.5%	0.4%	

③ 사교육의 폐해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 (사회적 영향) 한국사회는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34.0%)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이 ‘노후 보장’, ‘생활의 질’ 문제로 이어짐

<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 >

구분	전체	연 소득			
		~3천만원	3~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64명	275명	407명	251명	31명
계층 간 위화감 조성	34.0%	30.9%	34.6%	33.1%	61.3%
노후 보장	32.5%	27.3%	34.9%	35.1%	25.8%
생활의 질	27.4%	32.0%	26.3%	26.3%	9.7%
주택 마련	6.1%	9.8%	4.2%	5.6%	3.2%

## 5. 시사점

- 첫째, 사교육비 축소를 위해서 조속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함
  - 사교육 선택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이유가 공교육 부실 문제인데
  - 정부 차원의 사교육 대체 대책은 사교육 경감 효과도 없을뿐더러(EBS 교육방송 실시 이후에도 사교육 산업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인 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교원 평가 제도 등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임
- 둘째, 사교육 확장을 조장하는 특목고 및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함
  - 사교육 확장의 가장 큰 원인은 특목고 및 대학의 입시 문제임
  - 따라서, 사교육이 축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목고 및 대학 입시 제도를 보완하고, 특목고를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관행을 개선하고, 진정한 의미의 수학능력, 인성,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기준의 선발 방식이 정착되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셋째, 영어 회화 교육을 초, 중등 교과 과정 내로 편입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영어 회화 교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에서 어학연수나 영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교육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교육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 철저한 세원 발굴 등, 사교육이 지하경제화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이철선 연구위원 (cslee@hri.co.kr, 02-3669-4128)

이주량 연구위원 (jryanglee@hri.co.kr, 02-3669-4334)

< 부록: 조사 개요 >

- (조사 설계) 전국의 1,012세대를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와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전화조사를 실시함

·통계청의 전국 지역별 가구 수를 모집단으로 하는 층화추출법을 사용하여,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공휴일 제외), 13일 간 조사함

·표본추출에 따른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7이었음

·전국, 1012가구의 자녀별 사교육 현황을 모두 조사하였기 때문에 사교육 비용 추정에는 가구 수가 아닌 응답 자녀수인 총 1,704명이었음

< 전화 설문 조사 Sampling >

(단위: 명)

지역	서울	고양	분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계
목표 수	209	17	8	74	52	52	29	30	21	1000
응답 수	214	17	8	75	52	52	29	30	21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목표 수	185	33	32	41	39	42	59	66	11	1012
응답 수	187	33	34	43	39	42	59	66	11	

< 재학생별 표본 수 >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역		
			서울/신도시	6대 광역시	8개 시도
응답자 수(명)		1,704	386	433	885
재학 학교	유치원	281(16.5)	63(16.3)	65(15.0)	195(22.0)
	초등학교	826(48.5)	173(44.8)	215(49.7)	438(49.5)
	중학교	372(21.8)	75(19.4)	102(23.6)	195(22.0)
	고등학교	225(13.2)	75(19.4)	51(11.8)	99(11.2)

- (응답자 특성) 가구별 연소득에서는 3천~5천만 원 미만이 42.3%로 가장 많았고, 7천만 원 이상이 전체 응답가구 중 10.9%를 차지함
  - 최상 상중하, 4분위 수 측정을 위해 5천~7천만 원(18.7%)의 가구와 7천~1억 원미만의 가구 수를 합하여 분석함
  - 직업에서는 직장인이 47.0%가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33.7%), 공무원(11.0%)의 순이었음

< 응답자 특성 >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역			
		서울/신도시	6대 광역시	8개 시도	
응답자 수(명)	1,012	239	446	327	
연소득	3천~5천만 원 미만	42.3	41.5	41.8	43.5
	3천만 원 미만	28.2	20.1	29.4	32.4
	5천~7천만 원 미만	18.7	18.8	17.7	20.0
	7천~1억 원 미만	7.6	11.4	9.0	2.9
	1억 원 이상	3.3	8.3	2.1	1.3
직업	직장인	47.0	43.9	48.7	47.1
	자영업자	33.7	37.2	33.6	31.2
	공무원	11.0	5.9	10.8	15.0
	전문직	7.0	12.1	6.5	4.0
	주부(무직)	1.0	.4	.4	2.1
	농업/노무직	.2			.6
	학생	.1	.4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1/4분기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 증대

○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006년 4/4분기 성장률과 동일한 전년동기대비 4.0%를 기록(전기비로도 0.9%로 동일)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1/4분기에 경기 저점을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높여줌

- 경제 활동별로는 건설업 증가율이 작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6%에서 올해 1/4분기에 4.3%로 높아진 반면,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5.7% 증가에서 3.9% 증가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4/4분기와 유사)
- 지출 측면에서 우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작년 4/4분기에 비해 올해 1/4분기 증가율이 더욱 빨라져, 내수 부문 전체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크게 상승함(작년 4/4분기 2.6%p에서 올해 1/4분기에 3.3%p)
- 한편 수출 증가율은 작년 4/4분기에 10.4%에서 올해 1/4분기에 11.0%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수입 증가율은 7.7%에서 9.9%로 크게 늘어나 순(純)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같은 기간 1.2%p에서 0.9%p로 하락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1.2)	4.0(0.9)	4.0(0.9)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2.7	12.4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15.4	12.4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9.7	40.1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20.8	10.5	14.0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7.5	-0.4	-	
	취업자수(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73	2,267	2,312	
	실업률(%)	3.7	3.5	3.9	3.4	3.3	3.2	3.6	3.7	3.5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9.8	7.3	12.1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11	7	4	61	-4	5	-	
	무역수지(억\$)	232	161	13	48	25	75	4	10	15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1.7	2.2	2.2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1.9	2.4	2.5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단기 외화차입 자제에 따른 금리의 강세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약세 지속

- **금리** : 주초반 주요 경제지표 부진으로 4.62%까지 하락하였으나 주중반 주식 시장 호조 및 정부채의 입찰 부진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 (국채 10년물 : 4.67 → 4.70%)
- **환율** : 미 달러화는 3월 기준주택판매 예상치 하회 등에 따른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하여 약세를 보였지만,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전망에 따른 캐리 트레이드 지속 등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 시현 (\$/€ : 1.3589 → 1.3601 ¥/\$ : 118.69 → 119.57)

○ (국내 금융 시장) 주가와 원화 환율의 강세 지속

- **주가** :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적 개선 기업 및 저평가주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세로 상승세가 지속 (1,533.1 → 1,542.5)
- **금리** : 외환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단기외화차입 관련 추가 조치에 대한 경제 심리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강보합 시현 (국고채 3년 수익률, 5.02 → 5.03%)
- **환율** : 수출 기업들의 달러화 환전 수요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위한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 전환 및 은행권의 달러화 매입 등으로 원화 환율은 소폭 상승 (927.5 → 929.2)

○ (전망) 차익실현 매물의 출회에 따른 주가의 단기 조정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4/4	1/4	2/4	3/4	4/4	1/4	4.20.	4.27.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533.08	<b>1,542.5</b>
	국고채3년(%)	5.08	4.93	4.92	4.57	4.92	4.76	5.02	<b>5.03</b>
	원/달러	1,011.6	971.6	948.9	946.2	929.8	940.9	927.5	<b>929.2</b>
해외	DOW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2,962	<b>13,106</b>
	Nikkei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453	<b>17,429</b>
	미국채10년(%)	4.39	4.85	5.14	4.63	4.70	4.57	4.67	<b>4.70</b>
	일국채10년(%)	1.48	1.78	1.93	1.68	1.69	1.60	1.69	<b>1.66</b>
	달러/유로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589	<b>1.3601</b>
	엔/달러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18.69	<b>119.57</b>
	두바이(\$/배럴)	53.19	59.16	67.17	57.33	56.71	63.12	62.56	<b>64.81</b>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4.26) 기준